

#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현장 지원정책 제안\*

## Development of Child-Care Support Policy Strategies in Response to Declining Young Children's Population

김병만<sup>1</sup> 정수정<sup>2</sup> 이강훈<sup>3</sup> 임흥남<sup>4</sup> 김정주<sup>5</sup>

Byung Man Kim<sup>1</sup> Su Jeong Jeong<sup>2</sup> Kang Hoon Lee<sup>3</sup> Hong Nam Im<sup>4</sup> Jung Ju Kim<sup>5</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hild-care support policy strategy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aged 0-5 years. This will be achieved by collecting opinions from a panel of experts on child-care support policies through a Delphi survey.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panel of 20 experts in child-care policy was selected, a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ver three sessions. Data collected through the Delphi survey underwent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ntent validity ratio, coefficient of variation, agreement, and convergence. Data processing was carried out using Excel 2016 and SPSS 26.0.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a child-care support policy strategy addressing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aged 0-5 years was developed, comprising three policy areas, nine policy tasks, and 38 detailed policy tasks.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will not only enable the preparation of a strategy for child-care support policy to address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aged 0-5 years but also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haping the direction of child-care support policy in alignment with the common good.

**key words** children aged 0-5 years, population decline, child-care support policy, response strategy, Delphi survey

\* 이 논문은 2023년 10월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제1저자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2 공동저자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3 공동저자

교육빅데이터연구소 소장

#### 4 공동저자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5 교신저자

춘해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jj-child@ch.ac.kr)

## I. 서론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후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4천 39명으로 23만 명을 겨우 상회하였고,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24). 이 수치는 2017년 장래인구추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로 7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통계청, 2019), 2040년에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2%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특히 영유아 인구 역시 2010년 318만 9,352명에서 2022년 229만 5,053명으로 감소하였고, 2035년 214만 5,90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이에 따라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진국들에서는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수당/세제혜택, 휴직제도, 돌봄지원, 이민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다양한 인구 감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출산율 안정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도서관, 2023).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하고 매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0),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육 관련 과제는 전체 과제 중 36.2%이며, 보육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50.3%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정부가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장인수 외, 20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에서는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 정책 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여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 소통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존 정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정한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장인수 외, 2023). 첫째,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갖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및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다. 셋째,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등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다섯째,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 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통해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만든다.

최근 국내·외 언론을 통해 다루어지는 저출산 관련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 한다(안다영, 2023.10.31). 그동안은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구성원으로 잘 기르고 성장시키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영유아가 국가

의 미래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박희준, 2024.3.7).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출산과 양육의 영역이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님을 의미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손서영, 2023.12.3). 국내에서는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이소정, 2023)를 통해 정부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기 보육현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과 규칙으로(김병만, 2012),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욕구와 보편적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책임을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미 국민적 담론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정책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정해주, 2024.2.28).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 정책,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는 임신출산 지원비 바우처 사업과 함께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사업, 육아휴직 장려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든 영유아는 보육료와 교육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진에 효과가 없음이 합계출산율로 증명되었으며(김정호, 홍석철, 2012; 서문희, 이혜민, 2014; 홍석철 외, 2012),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가 장기화되는 등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24).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이삼식, 2020).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인 돌봄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순히 출산율을 저해하는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Kalwij(2010)는 이미 서유럽 16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비와 가족수당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으며, Duclos, Lefebvre와 Merrigan(2001)도 캐나다의 현금성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강경희, 전홍주, 2013). 즉,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현상은 어느 하나의 원인에 따른 결과이기보다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건강 등 개인적인 생활사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영역과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이삼식, 2020; 정혜영, 김병만, 2022). 이에 지금까지 특정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둔 단편적·미시적인 정책보다는 통합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정책을 개발하

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김병만, 황해익,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현장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육현장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보육현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시스템, 그리고 보육현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중심에 보육을 두고, 보육의 중심에 영유아와 부모를 두어야 할 것이다(정혜영, 김병만, 2022). 이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에서는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보육환경 질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등 보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적정 영역이나 정책의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보육현장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지원 정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델파이(delphi) 조사는 거리나 장소의 한계 없이 선정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책 제안이나 평가 등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병만, 황해익, 2015; 이강훈, 황해익, 2019; 정수정, 이강훈, 2022). 김병만과 황해익(2015)은 델파이 조사를 특정한 문제의식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 지성을 통해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최병모 외, 2006; Okoli & Pawlowski, 2004) 또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야 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소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보육정책 관련 분야의 연구로 델파이 조사에 기반한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 개발(김병만, 황해익, 2015), 학부모용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 개발(김병만, 2018b),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상향식 정책방안 수립연구(김병만, 2020a),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연구(김병만, 2020b)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지원 정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급 보육정책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현장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기반한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의 수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만 그룹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김병만, 김미진, 2018; Best & Kahn, 2016). 이에 본 선행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법을 활용하여 보육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급 보육정책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

전문가 집단	참여자	연령	성별	직위	전공	학력	경력
교수	전문가A	55세	여	교수	교육과정	박사	22년
	전문가B	47세	여	교수	유아교육	박사	18년
	전문가C	47세	여	교수	유아교육	박사	9년
	전문가D	47세	여	교수	유아특수교육	박사	8년
	전문가E	40세	여	교수	유아교육	박사	5년
	전문가F	55세	여	교수	아동복지	박사	8년
	전문가G	53세	여	교수	아동가족학	박사	14년
	전문가H	53세	여	교수	유아교육	박사	19년
	전문가I	48세	여	교수	아동학	박사	17년
	전문가J	45세	여	교수	아동학	박사	10년
행정가	전문가K	50세	여	연구위원	아동가족학	박사	1년
	전문가L	50세	여	연구위원	아동주거학	박사	1년
	전문가M	45세	여	센터장	유아교육	박사	4년
	전문가N	42세	여	센터장	유아교육	박사	8년
	전문가O	51세	여	센터장	유아교육	박사수료	9년
교원	전문가P	55세	여	원장	유아교육	박사	7년
	전문가Q	48세	여	원장	유아교육	박사	24년
	전문가R	40세	여	원장	유아교육	박사과정	15년
	전문가S	33세	여	교사	유아교육	박사수료	5년
	전문가T	33세	남	교사	유아교육	박사과정	1년

### 2. 연구도구

#### 1)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적정 영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선택형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적정 영역 선택 이유,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개발 방향 및 기타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등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헌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문헌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3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71개 소분류로 구성하였으며, 1차 시안에 대한 적절성을 Likert형으로 8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3차 시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3개 정책분야, 9개 정책과제, 38개 세부정책과제로 구성하였으며, 2차 시안에 대한 적절성을 Likert형으로 5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각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사분위수를 구하여 전문가에게 응답 결과를 피드백하였으며, 응답 평균이 4.0점 미만이거나, 응답 분포가 평균 아래로 치우친 문항(왜도>.00)을 수정, 통합 및 삭제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에 제시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처리를 위해 Excel 2016과 SPSS 26.0을 활용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적정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적정 영역 선택 이유와 개발 방향 및 기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결과는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설문내용의 필요성, 내용의 일관성, 용어 사용의 적합성, 문장의 이해도, 응답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그리고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영역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3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평균( $M$ ), 표준편차( $SD$ ), 왜도( $SKEW$ ), 사분위수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CVR$ ), 변이계수( $CV$ ), 합의도, 수렴도 등을 도출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합치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각 문항의 평균이 5.0 미만인 문항( $M < 5.0$ ), 표준편차가 1 초과인 문항( $SD > 1.0$ ), 표준편차( $SD$ )가 증가한 문항, 왜도가 양수인 문항( $SKEW > 0$ ), 내용타당도가 .42보다 작은 문항( $CVR < .42$ ), 변이계수가 .50 이상인 문항( $CV \geq .50$ ), 합의도가 .75 미만인 문항(합의도  $< .75$ ), 수렴도는 .50보다 큰 문항(수렴도  $> .50$ )은 전문가 패널의 의견수렴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문항으로 해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보육현장 지원정책 1차 시안은 표 2와 같다.

표 2.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1차 시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행·재정적 지원(4)	1-1. 보육지원 체계 (16)	1-1-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보육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1-1-2. 보육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1-3. 부처 간 연계와 통합에 기반한 통합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1-1-4. 인구변화를 중심으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
		1-1-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육아 친화 문화 조성
		1-1-6. 사회변동과 아동 중심에 주목하여 놀이·삶의 질·다양성 관련 인식 제고
		1-1-7.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보육지원 프로그램과 체계 개발
		1-1-8.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다원화된 보육기관 지원 정책 개발
		1-1-9.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육아친화적 직장 문화 구축
		1-1-10. 보육교직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 마련
		1-1-11. 영세·소규모 직장어린이집의 개원 지원 체계 마련 및 확산
		1-1-12.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정책 제안
		1-1-13. 보육지원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체계 구축
		1-1-14. 인구변화에 기반한 찾아가는 보육지원 서비스 정책 마련
		1-1-15. 저출생 문제해결식 접근보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공동선 기반 보육지원 정책 제안
		1-2. 보육지원 전달 (10)
1-2-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육아휴직 제도 의무시행 및 확대		
1-2-2. 지역·기관 유형·규모 등에 차별 없는 보육기관 운영 지원		
1-2-3. 보육기관 질적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1-2-4. 장애·다문화·한부모가정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지원		
1-2-5. 농어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돌봄 지원 확대		
1-2-6. 인구 희소 지역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강구		
1-2-7.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육아지원 서비스 개발 및 확산		
1-2-8. 보육현장의 변혁과 요구에 기반한 체계화 및 보육지원 내용의 명확한 전달		
1-2-9. 보육 분야 전문가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공동선 기반 협력적 네트워크 지원 강화		
1-2-10. 인구변화에 따른 보육지원 연계 및 홍보 채널의 다각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교육적 지원(3)	1-3. 현금 및 현물 등 직접급여 지원 (7)	1-3-1.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보육지원 예산 확대	
		1-3-2. 공동선에 입각한 정부의 보육재정지원 확대	
		1-3-3. 격차 없는 보육기관과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교직원 수당 지원 확대	
		1-3-4. 격차 없는 보육기관과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고경력 교사 수당 지원 확대	
		1-3-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보육기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1-3-6. 기관유형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기관 재정 지원 확대	
		1-3-7. 보육교직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원 마련	
	1-4. 재화 및 바우처 등 간접급여 지원(3)	1-4-1. 보육기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시설·프로그램 이용 등 바우처 지원 확대	
		1-4-2. 보육기관의 지역사회 내 교육시설·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확대	
		1-4-3. 지자체별 차별 없는 보육 정책 재화 및 서비스 지원	
	2-1. 교육과정 운영 지원 (5)	2-1. 교육과정 운영 지원 (5)	2-1-1.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정 참여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실행 지원
			2-1-2.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교사의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한 보육과정 질제고 및 기관별 격차 해소
			2-1-3.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인구·생태·다양성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2-1-4.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2-1-5.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다원화된 보육과정 운영 및 지원으로 학부모 선택권 보장
		2-2. 보육 교직원 지원 (9)	2-2-1. 격차 없는 보육과정 운영과 역량 지원을 위한 기관장 대상 교육 지원
			2-2-2.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2-2-3.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보육정책 이해 교육 지원
			2-2-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가구형태에 대한 이해 교육 지원
2-2-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다양성교육, 놀이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마련			
2-2-6.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2-2-7. 연장반교사 확충, 보조교사 확대, 사무원 채용 필수 조항 등 보육과정 관련 인력 지원 확대			
2-2-8. 특수교사, 외국아동 및 가정 지원 교사 등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맞춤형 특수 교원 인력 지원 확보			
2-2-9. 정부 차원의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2-3. 부모교육 지원 (4)	2-3. 부모교육 지원 (4)	2-3-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교육 기회 제공 및 채널의 다양화	
		2-3-2. 어린이집 입소 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기회 제공	
		2-3-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수령 전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실시	
		2-3-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예비부모용 교육 지원 체계 구축	
3. 보육 환경적 지원(3)	3-1. 물리적 환경 지원 (7)	3-1-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영유아 건강·안전 환경 구축 및 지원 확대	
		3-1-2. 보육현장의 변혁과 요구에 기반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확대	
		3-1-3. 사회변동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지원 방안 강구	
		3-1-4.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1-5. 지역 간 보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인력 및 운영관리 지원
		3-1-6. 공동선 기반의 보육공동체 운영 및 지원
		3-1-7.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안전한 놀이공간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한 양육 및 보육환경 조성
	3-2.	3-2-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심리복지 지원 강화
정서적 지원	(3)	3-2-2. 사회변동과 영유아의 기본 권리에 입각한 신체·정서발달 지원 보장
		3-2-3.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심층적 부모상담 체계 강화
	3-3.	3-3-1.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교직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확대
인적 지원	(7)	3-3-2.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고경력 교사 수당 지원 확대
		3-3-3.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전문성 함양 지원
		3-3-4.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체 및 보조교사 지원 보장
		3-3-5.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장반 교사 지원보장
		3-3-6. 사회변동에 따른 경계선상 영유아의 특수교사 및 상담교사 지원 보장
		3-3-7.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환경 구축

##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 평정 결과 (N = 20)

정책분야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합의도	수렴도
1. 행·재정적 지원	4.95	.22	-4.47	5.00-5.00	1.00	.05	1.00	.00
2. 교육적 지원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3. 보육 환경적 지원	4.85	.49	-3.44	5.00-5.00	1.00	.10	1.00	.00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3개 정책분야에 대한 평균은 4.75~4.95( $M \geq 3.40$ )이었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분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3개 정책분야 모두에서 음수( $SKEW < 0$ )였으며, 사분위수(Q1-Q3)의 분포가 모두 4.00에서 5.00 사이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CVR)를 살펴본 결과 3개 정책분야 모두에서 CVR은 1.00( $\geq .42$ )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개 정책분

야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CV),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변이계수는 .05~.10( $CV < .50$ ), 합의도는 .85~1.00(합의도  $\geq .75$ ), 수렴도는 .00~.38(수렴도  $\leq .50$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이라는 접미사를 삭제하여 용어를 보다 간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는 행·재정 지원, 교육 지원, 보육 환경 지원으로 수정하였다.

2)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N = 20)

정책과제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합의도	수렴도
1-1. 보육지원 체계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1-2. 보육지원 전달	4.55	.76	-1.39	4.00-5.00	1.00	.17	.80	.50
1-3. 현금 및 현물 등 직접급여 지원	4.50	.76	-1.19	4.00-5.00	1.00	.17	.80	.50
1-4. 재화 및 바우처 등 간접급여 지원	4.30	1.03	-1.32	4.00-5.00	.80	.24	.80	.50
2-1. 교육과정 운영 지원	4.70	.47	-.95	4.00-5.00	1.00	.10	.80	.50
2-2. 보육 교직원 지원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2-3. 부모교육 지원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3-1. 물리적 환경 지원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3-2. 정서적 지원	4.70	.57	-1.84	4.00-5.00	1.00	.12	.85	.38
3-3. 인적 지원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10개 정책과제에 대한 평균은 4.30~4.90( $M \geq 3.40$ )이었으며, 1-4. 재화 및 바우처 등 간접급여 지원을 제외한 모든 정책과제에서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10개 정책과제 모두에서 음수( $SKEW < 0$ )였으며, 사분위수(Q1-Q3)의 분포가 모두 4.00에서 5.00 사이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CVR)를 살펴본 결과 10개 정책과제 모두에서 CVR은 .80~1.00( $CVR \geq .42$ )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0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CV),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변이계수는 .06~.24( $CV < .50$ ), 합의도는 .80~1.00(합의도  $\geq .75$ ), 수렴도는 .00~.50(수렴도  $\leq .50$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계에 전달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제 영역 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1-1. 보육지원 시스템 구축과 1-2. 보육지원 전달 체계로 수정하였다. 또한 1-4. 재화 및 바우처

등 간접급여 지원은 삭제하거나 1-3. 현금 및 현물 등 직접급여 지원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및 현물 등과 재화 및 바우처 등의 수식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1-3. 직·간접급여 지원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2-1.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경우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혼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2-1.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3. 부모교육 지원의 경우 2-2. 보육 교직원 지원과 진술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2-3. 부모 지원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2-3. 인력 지원의 경우 처우개선과 전문성 함양 등 보육 교직원 지원에 내용이 중복되기에 삭제하고 인력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3-3. 인력 지원으로 수정하였다.

3)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N = 20)

세부정책	평균 (M)	표준 편차 (SD)	왜도 (SK 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 수 (CV)	합의도	수렴도
1-1-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보육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1-1-2. 보육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80	.52	-2.74	5.00-5.00	1.00	.11	1.00	.00
1-1-3. 부처 간 연계와 통합에 기반한 통합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4.50	1.00	-2.63	4.00-5.00	.90	.22	.80	.50
1-1-4. 인구변화를 중심으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	4.70	.57	-1.84	4.00-5.00	1.00	.12	.85	.38
1-1-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육아 친화 문화 조성	4.45	.94	-1.92	4.00-5.00	.80	.21	.80	.50
1-1-6. 사회변동과 아동 중심에 주목하여 놀이·삶의 질·다양성 관련 인식 제고	4.50	.61	-.78	4.00-5.00	1.00	.13	.80	.50
1-1-7.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보육지원 프로그램과 체계 개발	4.50	.61	-.78	4.00-5.00	1.00	.13	.80	.50
1-1-8.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다원화된 보육기관 지원 정책 개발	4.60	.50	-.44	4.00-5.00	1.00	.11	.80	.50
1-1-9.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육아친화적 직장 문화 구축	4.65	.75	-2.69	4.00-5.00	.90	.16	.85	.38
1-1-10. 보육교직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 마련	4.55	.69	-1.28	4.00-5.00	1.00	.15	.80	.50
1-1-11. 영세·소규모 직장어린이집의 개원 지원 체계 마련 및 확산	4.10	.85	-.20	3.00-5.00	1.00	.21	.50	1.00
1-1-12.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정책 제언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1-1-13. 보육지원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체계 구축	4.75	.44	-1.25	5.00-5.00	1.00	.09	.85	.38
1-1-14. 인구변화에 기반한 찾아가는 보육지원 서비스 정책 마련	4.30	.98	-1.43	4.00-5.00	.80	.23	.80	.50

세부정책	평균 (M)	표준 편차 (SD)	왜도 (SK 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 수 (CV)	합의도	수렴도
1-1-15. 저출생 문제해결식 접근보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공동 선 기반 보육지원 정책 제안	4.55	.83	-2.05	4.00-5.00	.90	.18	.80	.50
1-1-16.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체계 구축	4.60	.60	-1.25	4.00-5.00	1.00	.13	.80	.50
1-2-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육아휴직 제도 의무시행 및 확대	4.45	.89	-1.59	4.00-5.00	.90	.20	.80	.50
1-2-2. 지역·기관 유형·규모 등에 차별 없는 보육기관 운영 지원	4.25	.85	-.53	3.00-5.00	1.00	.20	.61	.88
1-2-3. 보육기관 질적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4.40	.82	-1.55	4.00-5.00	.90	.19	.80	.50
1-2-4. 장애·다문화·한부모가정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에 기반한 맞춤 형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지원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1-2-5. 농어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돌봄 지원 확대	4.50	.76	-1.19	4.00-5.00	1.00	.17	.80	.50
1-2-6. 인구 희소 지역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강구	4.60	.60	-1.25	4.00-5.00	1.00	.13	.80	.50
1-2-7.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육아지원 서비스 개발 및 확산	4.55	.69	-1.28	4.00-5.00	1.00	.15	.80	.50
1-2-8. 보육현장의 변혁과 요구에 기반한 체계화 및 보육지원 내용의 명확한 전달	4.25	.97	-2.11	4.00-5.00	.90	.23	.75	.50
1-2-9. 보육 분야 전문가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공동선 기반 협력적 네트워크 지원 강화	4.50	.76	-1.19	4.00-5.00	1.00	.17	.80	.50
1-2-10. 인구변화에 따른 보육지원 연계 및 홍보 채널의 다각화	4.50	.69	-1.08	4.00-5.00	1.00	.15	.80	.50
1-3-1.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보육지원 예산 확대	4.75	.55	-2.24	5.00-5.00	1.00	.12	1.00	.00
1-3-2. 공동선에 입각한 정부의 보육재정지원 확대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1-3-3. 격차 없는 보육기관과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교직원 수당 지원 확대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1-3-4. 격차 없는 보육기관과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고경력 교시 수당 지원 확대	4.45	.76	-1.02	4.00-5.00	1.00	.17	.80	.50
1-3-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보육기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4.60	.60	-1.25	4.00-5.00	1.00	.13	.80	.50
1-3-6. 기관유형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기관 재정 지원 확대	4.35	.75	-.70	4.00-5.00	1.00	.17	.78	.50
1-3-7. 보육교직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원 마련	4.30	1.13	-1.88	4.00-5.00	.80	.26	.80	.50
1-4-1. 보육기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시설·프로그램 이용 등 바우 처 지원 확대	4.20	.95	-2.07	4.00-5.00	.90	.23	.75	.50
1-4-2. 보육기관의 지역사회 내 교육시설·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확대	4.25	.97	-2.11	4.00-5.00	.90	.23	.75	.50
1-4-3. 지자체별 차별 없는 보육 정책 재화 및 서비스 지원	4.10	1.07	-1.36	3.00-5.00	.90	.26	.56	.88
2-1-1.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정 참여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실행 지원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세부정책	평균 (M)	표준 편차 (SD)	왜도 (SK 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 수 (CV)	합의도	수렴도
2-1-2.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교사의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한 보육과정 질제고 및 기관별 격차 해소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2-1-3.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인구·생태·다양성 등이 포함 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2-1-4.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핵심역량 중심 교육 과정 운영 지원	4.60	.50	-.44	4.00-5.00	1.00	.11	.80	.50
2-1-5.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다원화된 보육과정 운영 및 지원으로 학부모 선택권 보장	4.15	.88	-.84	4.00-5.00	.90	.21	.75	.50
2-2-1. 격차 없는 보육과정 운영과 역량 지원을 위한 기관장 대상 교육 지원	4.55	.69	-1.28	4.00-5.00	1.00	.15	.80	.50
2-2-2.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4.70	.47	-.95	4.00-5.00	1.00	.10	.80	.50
2-2-3.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보육정책 이해 교육 지원	4.40	.60	-.39	4.00-5.00	1.00	.14	.75	.50
2-2-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가구형태에 대한 이해 교육 지원	4.15	.75	-.26	4.00-5.00	1.00	.18	.75	.50
2-2-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다양성교육, 놀이 및 교육과정 에 대한 교사연수 마련	4.65	.59	-1.52	4.00-5.00	1.00	.13	.80	.50
2-2-6.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4.60	.68	-1.51	4.00-5.00	1.00	.15	.80	.50
2-2-7. 연장반교사 확충, 보조교사 확대, 사무원 채용 필수 조항 등 보육과정 관련 인력 지원 확대	4.80	.52	-2.74	5.00-5.00	1.00	.11	1.00	.00
2-2-8. 특수교사, 외국어동 및 가정 지원 교사 등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맞춤형 특수 교원 인력 지원 확보	4.65	.59	-1.52	4.00-5.00	1.00	.13	.80	.50
2-2-9. 정부 차원의 이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내실화	4.40	.68	-.71	4.00-5.00	1.00	.15	.78	.50
2-3-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교육 기회 제공 및 채널의 다양화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2-3-2. 어린이집 입소 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기회 제공	4.55	.51	-.22	4.00-5.00	1.00	.11	.80	.50
2-3-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수령 전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실시	4.70	.47	-.95	4.00-5.00	1.00	.10	.80	.50
2-3-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예비부모용 교육 지원 체계 구축	4.50	.69	-1.08	4.00-5.00	1.00	.15	.80	.50
3-1-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영유아 건강·안전 환경 구축 및 지원 확대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3-1-2. 보육현장의 변혁과 요구에 기반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확대	4.55	.76	-2.19	4.00-5.00	.90	.17	.80	.50
3-1-3. 사회변동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지원 방안 강구	4.60	.50	-.44	4.00-5.00	1.00	.11	.80	.50
3-1-4.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보육환경 조성 지원	4.35	.67	-.55	4.00-5.00	1.00	.15	.75	.50
3-1-5. 지역 간 보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인력 및 운영관리 지원	4.35	.93	-1.24	4.00-5.00	.90	.21	.80	.50
3-1-6. 공동선 기반의 보육공동체 운영 및 지원	4.20	.89	-1.41	4.00-5.00	.80	.21	.75	.50
3-1-7.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안전한 놀이공간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한 양육 및 보육환경 조성	4.60	.50	-.44	4.00-5.00	1.00	.11	.80	.50
3-2-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심리복지 지원 강화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세부정책	평균 (M)	표준 편차 (SD)	왜도 (SK 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 수 (CV)	합의도	수렴도
3-2-2. 사회변동과 영유아의 기본 권리에 입각한 신체·정서발달 지원 보장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3-2-3.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심층적 부모상담 체계 강화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3-3-1.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교직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확대	4.70	.57	-1.84	4.00-5.00	1.00	.12	.85	.38
3-3-2.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고경력 교사 수당 지원 확대	4.20	.95	-.85	3.00-5.00	.90	.23	.61	.88
3-3-3.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전문성 함양 지원	4.55	.60	-1.00	4.00-5.00	1.00	.13	.80	.50
3-3-4.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체 및 보조교사 지원 보장	4.70	.47	-.95	4.00-5.00	1.00	.10	.80	.50
3-3-5.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장반 교사 지원보장	4.50	.95	-2.90	4.00-5.00	.90	.21	.80	.50
3-3-6. 사회변동에 따른 경계선상 영유아의 특수교사 및 상담교사 지원 보장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3-3-7.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환경 구축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71개 세부 정책에 대한 평균은 4.10~4.90( $M \geq 3.40$ )이었으며, 1-3-7. 보육교직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원 마련, 1-4-3. 지자체별 차별 없는 보육 정책 재화 및 서비스 지원을 제외한 모든 세부정책에서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세부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71개 세부정책 모두에서 음수( $SKEW < 0$ )였으며, 사분위수(Q1-Q3)의 분포가 모두 4.00에서 5.00 사이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CVR)를 살펴본 결과 71개 세부정책 모두에서 CVR은 .80~1.00( $CVR \geq .42$ )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71개 세부정책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CV),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변이계수는 .06~.26( $CV < .50$ )으로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합의도에서는 1-1-11. 영세·소규모 직장어린이집의 개원 지원 체계 마련 및 확산, 1-2-2. 지역·기관 유형·규모 등에 차별 없는 보육기관 운영 지원, 1-4-3. 지자체별 차별 없는 보육 정책 재화 및 서비스 지원, 3-3-2. 지역 간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와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고경력 교사 수당 지원 확대를 제외한 모든 세부정책에서 .75~1.00(합의도  $\geq .75$ ), 수렴도는 .00~.50(수렴도  $\leq .50$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5, 1-1-9, 1-2-1. 1-2-7, 1-2-8, 2-3-4는 보육현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7, 1-1-10, 1-3-7, 3-1-1, 3-1-2, 3-3-3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또한 1-1-14는 기존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으며, 1-1-3과 1-1-4, 1-1-8과 1-1-11, 1-1-12와 1-2-2, 1-1-13과 1-2-9, 1-2-5와 1-2-6, 1-3-1과 1-3-2, 1-3-3과 1-3-4, 1-3-5와 1-3-6 & 1-4-3, 1-4-1과 1-4-2, 2-1-3과 2-1-4, 2-2-4와 2-2-5,

2-2-7과 3-3-4 & 3-3-5, 2-2-8과 3-3-6은 중복된 정책으로 통합하였다. 한편, 1-1-6, 1-1-15, 1-1-16, 1-2-2, 1-2-4, 1-2-10, 2-1-1, 2-1-2, 2-1-5, 2-2-1, 2-2-2, 2-2-3, 2-3-3, 3-2-1, 3-2-2, 3-2-3, 3-3-7은 문장 진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술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정책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아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2-2-6는 1-3. 직·간접급여 지원으로 이동하였다. 끝으로 1-2-3은 세부정책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1차 시안 중 3개 정책분야가 수정되었고, 10개 정책과제가 9개 정책과제로 통합되었으며, 5개 정책과제가 수정되었다. 또한 14개 세부정책이 삭제되었고, 28개 세부정책이 13개 세부정책으로 통합되었으며, 17개 세부정책이 수정되고, 1개 세부정책이 이동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차 시안을 수정하고,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으로부터 정책분야,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수정하여 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전략 2차 시안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3개 정책분야, 9개 정책과제, 38개 세부정책과제로 구성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전략 2차 시안을 마련하였다.

### 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 재평정 결과 (N = 20)

정책분야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합의도	수렴도
1. 행·재정 지원	4.95	.22	-4.47	5.00-5.00	1.00	.05	1.00	.00
2. 교육 지원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3. 보육 환경 지원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3개 정책분야에 대한 평균은 4.80~4.95( $M \geq 3.40$ )이었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분야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왜도는 3개 정책분야 모두에서 음수( $SKEW < 0$ )였으며, 사분위수(Q1-Q3)의 분포가 모두 4.00에서 5.00 사이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CVR)를 살펴본 결과 3개 정책분야 모두에서 CVR은 1.00( $CVR \geq .42$ )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개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CV),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변이계수는 .05~.09( $CV < .50$ ), 합의도는 1.00(합의도  $\geq .75$ ), 수렴도는 .00(수렴도  $\leq .50$ )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N = 20)

정책과제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합의도	수렴도
1-1. 보육지원 시스템 구축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1-2. 보육지원 전달 체계	4.60	.60	-1.25	4.00-5.00	1.00	.13	.80	.50
1-3. 직·간접급여 지원	4.70	.57	-1.84	4.00-5.00	1.00	.12	.85	.38
2-1.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2-2. 보육 교직원 지원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2-3. 부모 지원	4.85	.49	-3.44	5.00-5.00	1.00	.10	1.00	.00
3-1. 물리적 환경 지원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3-2. 정서적 지원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3-3. 인력 지원	4.95	.22	-4.47	5.00-5.00	1.00	.05	1.00	.00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9개 정책과제에 대한 평균은 4.60~4.90( $M \geq 3.40$ )이었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9개 정책과제 모두에서 음수( $SKEW < 0$ )였으며, 사분위수(Q1-Q3)의 분포가 모두 4.00에서 5.00 사이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CVR)를 살펴본 결과 9개 정책과제 모두에서 CVR은 1.00( $CVR \geq .42$ )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9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CV),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변이계수는 .05~.13( $CV < .50$ ), 합의도는 .80~1.00(합의도  $\geq .75$ ), 수렴도는 .00~.50(수렴도  $\leq .50$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전략의 세부정책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N = 20)

세부정책과제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합의도	수렴도
1-1-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보육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1-1-2. 보육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95	.22	-4.47	5.00-5.00	1.00	.05	1.00	.00
1-1-3. 부처 간 연계에 기반한 통합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4.55	.60	-1.00	4.00-5.00	1.00	.13	.80	.50
1-1-4. 사회변동에 주목하여 놀이·삶의 질·다양성 관련 인식 제고	4.55	.76	-1.39	4.00-5.00	1.00	.17	.80	.50
1-1-5.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다원화된 보육기관 지원 정책 개발	4.60	.60	-1.25	4.00-5.00	1.00	.13	.80	.50
1-1-6. 저출생 문제해결식 접근보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에 기반한 보육지원 정책 마련	4.60	.68	-1.51	4.00-5.00	1.00	.15	.80	.50
1-1-7. 저출생 대응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체계 구축	4.75	.55	-2.24	5.00-5.00	1.00	.12	1.00	.00
1-2-1. 취약 지역·기관, 유형·규모 등 보육기관 맞춤형 운영 지원 강화	4.30	.80	-.63	4.00-5.00	1.00	.19	.78	.50
1-2-2. 취약 아동(장애·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의 다양한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지원	4.70	.57	-1.84	4.00-5.00	1.00	.12	.85	.38
1-2-3. 인구 희소 지역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강구	4.65	.59	-1.52	4.00-5.00	1.00	.13	.80	.50
1-2-4. 정부와 보육 지원 전달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지원 강화	4.55	.69	-1.28	4.00-5.00	1.00	.15	.80	.50
1-2-5. 보육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홍보 채널의 다각화	4.45	.69	-.89	4.00-5.00	1.00	.15	.80	.50
1-3-1.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보육지원 예산 확대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1-3-2. 격차 없는 보육기관과 우수한 교직원(고경력 포함) 확보를 위한 교직원 수당 지원 확대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1-3-3.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보육기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1-3-4. 보육기관의 지역사회 내 교육·보육지원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확대	4.35	.81	-1.42	4.00-5.00	1.00	.19	.78	.50
1-3-5.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처우(급여·수당·복지 등) 개선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2-1-1.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한 국가수준 통합 영유아교육과정(0-5세) 마련 및 실행 지원	5.00	.00	.00	5.00-5.00	1.00	.00	1.00	.00
2-1-2. 보육교사의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한 교육·보육과정 질 제고	4.60	.50	-.44	4.00-5.00	1.00	.11	.80	.50

세부정책과제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	사분위수 (Q1-Q3)	내용 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합의도	수렴도
2-1-3. 미래교육 핵심역량(인구·생태·다양성 등) 중심 교육·보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4.70	.47	-.95	4.00-5.00	1.00	.10	.80	.50
2-1-4. 다원화된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4.10	.79	-.19	3.00-5.00	1.00	.19	.63	.75
2-2-1. 격차 없는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역량 지원을 위한 기관장 교육 강화	4.65	.67	-1.78	4.00-5.00	1.00	.14	.85	.38
2-2-2.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4.65	.59	-1.52	4.00-5.00	1.00	.13	.80	.50
2-2-3. 최신 보육정책 이해를 위한 교직원 대상 교육 지원	4.45	.60	-.58	4.00-5.00	1.00	.14	.78	.50
2-2-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다양성교육, 놀이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	4.75	.44	-1.25	4.00-5.00	1.00	.09	.85	.38
2-2-5. 정부 차원의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4.45	.69	-.89	4.00-5.00	1.00	.15	.80	.50
2-3-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교육 기회 제공 및 채널의 다양화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2-3-2. 어린이집 입소 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기회 제공	4.50	.61	-.78	4.00-5.00	1.00	.13	.80	.50
2-3-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수령 전 의무 부모교육 실시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3-1-1. 보육현장의 변혁과 요구에 기반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확대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3-1-2. 사회변동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지원 방안 강구	4.50	.61	-.78	4.00-5.00	1.00	.13	.80	.50
3-1-3.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놀이공간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구축 및 지원	4.65	.49	-.68	4.00-5.00	1.00	.11	.80	.50
3-2-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권리 및 심리복지 지원 강화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3-2-2. 사회변동과 영유아의 기본 권리에 입각한 정서발달 지원 보장	4.85	.37	-2.12	5.00-5.00	1.00	.08	1.00	.00
3-2-3.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 정서 지원 조력 체계 강화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3-3-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추진	5.00	.00	.00	5.00-5.00	1.00	.00	1.00	.00
3-3-2.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과정 관련 인력(대체·보조·연장반·사무원 등) 지원 확대	4.80	.41	-1.62	5.00-5.00	1.00	.09	1.00	.00
3-3-3.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원 인력(상담·특수·다문화 등) 지원 확보	4.90	.31	-2.89	5.00-5.00	1.00	.06	1.00	.00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전략의 세부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재평정 결과 38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평균은 4.10~5.00( $M \geq 3.40$ )이었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세부정

책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38개 세부정책과제 모두에서 음수( $SKEW < 0$ )였으며, 사분위수( $Q1-Q3$ )의 분포가 모두 4.00에서 5.00 사이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 $CVR$ )를 살펴본 결과 38개 세부정책과제 모두에서  $CVR$ 은 1.00( $CVR \geq .42$ )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8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 $CV$ ),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변이계수는 .00~.19( $CV < .50$ )로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합의도에서는 2-1-4. 다원화된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제외한 모든 세부정책과제에서 .78~1.00(합의도  $\geq .75$ ), 수렴도는 .00~.50(수렴도  $\leq .50$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1-4는 ‘다원화된’이라는 수식어가 모호하여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으로 수정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2차 시안 중 1개 세부정책과제가 수정되었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시안을 수정하고,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으로부터 정책분야,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수정하여 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최종안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3개 정책분야, 9개 정책과제, 38개 세부정책과제로 구성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전략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4)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최종안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최종안은 표 9와 같다.

표 9.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최종안

정책분야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1. 행·재정 지원(3)	1-1. 보육지원 시스템 구축(7)	1-1-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보육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1-1-2. 보육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1-3. 부처 간 연계에 기반한 통합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1-1-4. 사회변동에 주목하여 놀이·삶의 질 다양성 관련 인식 제고
		1-1-5.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다원화된 보육기관 지원 정책 개발
		1-1-6. 저출생 문제해결식 접근보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에 기반한 보육지원 정책 마련
		1-1-7. 저출생 대응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체계 구축
	1-2. 보육지원 전달 체계(5)	1-2-1. 취약 지역·기관, 유형·규모 등 보육기관 맞춤형 운영 지원 강화
		1-2-2. 취약 아동(장애·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의 다양한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지원
		1-2-3. 인구 희소 지역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강구
		1-2-4. 정부와 보육 지원 전달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지원 강화
		1-2-5. 보육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홍보 채널의 다각화

2. 교육 지원(3)	1-3. 직·간접 급여 지원(5)	1-3-1.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보육지원 예산 확대 1-3-2. 격차 없는 보육기관과 우수한 교직원(고경력 포함) 확보를 위한 교직원 수당 지원 확대 1-3-3.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보육기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1-3-4. 보육기관의 지역사회 내 교육·보육지원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바꾸쳐 지원 확대 1-3-5.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처우(급여·수당·복지 등) 개선
	2-1.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4)	2-1-1.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한 국가수준 통합 영유아교육과정(0-5세) 마련 및 실행 지원 2-1-2. 보육교사의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한 교육·보육과정 질 제고 2-1-3. 미래교육 핵심역량(인구·생태·다양성 등) 중심 교육·보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2-1-4. 다양한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2-2. 보육 교직원 지원(5)	2-2-1. 격차 없는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역량 지원을 위한 기관장 교육 강화 2-2-2.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2-2-3. 최신 보육정책 이해를 위한 교직원 대상 교육 지원 2-2-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다양성교육, 놀이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 2-2-5. 정부 차원의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2-3. 부모 지원(3)	2-3-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교육 기회 제공 및 채널의 다양화 2-3-2. 어린이집 입소 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기회 제공 2-3-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수령 전 의무 부모교육 실시
	3-1. 물리적 환경 지원(3)	3-1-1. 보육현장의 변혁과 요구에 기반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확대 3-1-2. 사회변동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지원 방안 강구 3-1-3.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놀이공간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구축 및 지원
3. 보육 환경 지원(3)	3-2. 정서적 지원(3)	3-2-1.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권리 및 심리복지 지원 강화 3-2-2. 사회변동과 영유아의 기본 권리에 입각한 정서발달 지원 보장 3-2-3.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 정서 지원 조력 체계 강화
	3-3. 인력 지원(3)	3-3-1.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추진 3-3-2. 보육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육과정 관련 인력(대체·보조·연장반·사무원 등) 지원 확대 3-3-3.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원 인력(상담·특수·다문화 등) 지원 확보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현장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학 및 보육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급 보육 정책 관련 전문가 20명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 한 후 3회기에 걸쳐 델파이 조사(김병만, 2018a, 2018b, 2020a, 2020b)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영역 선택 이유와 개발 방향 및 기타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현금성 양육 지원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적 안정, 정신 건강,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 촘촘한 복지 제도 등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안정적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교육적 지원, 환경적 지원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되 영유아, 교사, 부모, 보육기관, 사회 네트워크와 기회, 서비스, 재화/상품, 세금감면, 현금급여, 권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위영역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영역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유아, 교사, 부모, 보육기관, 사회 네트워크로 분류한 정책 영역과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교육적 지원, 환경적 지원, 복지적 지원으로 분류한 정책 영역, 그리고 기획, 서비스, 재화/상품/세금감면, 현금급여, 권력으로 분류한 정책 영역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영역을 행·재정적 지원, 교육적 지원, 보육 환경적 지원으로 대분류하고 보육지원 체계, 보육지원 전달, 현금 및 현물 등 직접 급여 지원, 재화 및 바우처 등 간접급여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부모교육 지원, 물리적 환경 지원, 정서적 지원, 인적 지원으로 중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전략들을 소분류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마련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1차 시안은 3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71개 소분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흔히 출산율이 변화하였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대우하는 방식이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윤정현, 2018)에서 출산율 증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결혼하고 출산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삶의 변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정책적·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보육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되고 질 높은 보육시스템 강화, 보육교직원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 등 한 개인이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안전망이 확보되었음을 인식한 이후에 미혼이 기혼으로, 기혼부부가 자녀를 가진 부부로 변화하게 된다고 본 정혜영 외(201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은 단순히 행정적·재정적 지원 외에도 교육적 지원과 보육환경 지원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양적·질적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육시설 서비스가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보육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육현장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강화 정책이 출산율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강경희, 전홍주, 2013)과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최혜영, 박진재, 신나리, 201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보육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영유아교사와 국가수준 보육과정,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광범위한 통합보육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

한 평정 결과 3개 정책 분야에 대한 평균은 4.75 이상이었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분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3개 정책분야 모두 음수였으며, 사분위수의 분포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3개 정책분야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3개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이라는 접미사를 삭제하여 용어를 보다 간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분야는 행·재정 지원, 교육 지원, 보육 환경 지원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10개 정책과제에 대한 평균은 4.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4. 재화 및 바우처 등 간접급여 지원을 제외한 모든 정책과제에서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10개 정책과제 모두 음수로 나타났고, 사분위수의 분포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10개 정책과제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10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개 정책과제를 수정하고, 1개 정책과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지원 시스템 구축, 보육지원 전달 체계, 직·간접급여 지원,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보육 교직원 지원, 부모 지원, 물리적 환경 지원, 정서적 지원, 인력 지원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71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평균은 4.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외한 모든 세부정책과제에서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세부정책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71개 세부정책과제 모두 음수로 나타났고, 사분위수의 분포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71개 세부정책과제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71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7개 세부정책과제는 수정하고, 28개 세부정책과제는 통합, 12개 세부정책과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38개 세부정책과제로 수정하였다.

셋째,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전략의 정책분야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3개 정책분야에 대한 평균은 4.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분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3개 정책분야 모두 음수로 나타났고, 사분위수의 분포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3개 정책분야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3개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3개 정책분야를 최종 정책분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다음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9개 정책과제에 대한 평균은 4.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정책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9개 정책과제 모두 음수로 나타났고, 사분위수의 분포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9개 정책과제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9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9개 정책과제를 최종 정책과제로 확정하였다.

끝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의 세부정책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 38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평균은 4.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1을 초과하는 세부정책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38개 세부정책과제 모두 음수로 나타났고, 사분위수의 분포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38개 세부정책과제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38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계수, 합의도, 수렴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1-4는 ‘다원화된’이라는 수식어가 모호하여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으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1개 정책과제를 수정한 이후 38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최종 세부정책과제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이 임신출산지원비 바우처 사업과 함께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사업, 육아휴직 장려 사업 등 현물성 금전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진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육현장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에 앞서 보육현장 지원 정책의 마련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이영욱, 2015)에서 보육현장 지원정책은 금전적 지원이라는 틀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단계별 필요조건에 맞는 질 높은 교사 교육 지원, 그리고 거시적으로 교사가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보육정책은 보육의 공동선(common good)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교사와 지자체까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동선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와는 관계없이 보편적인 공적 교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김병만, 2018a),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현장 지원정책 전략은 공동선에 기반한 보육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보육을 지원하는 주체와 지원받는 주체로 구분되며, 이러한 두 영역의 주체가 모두 공동선의 합의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모두가 만족스러운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육정책은 보육을 지원받는 쪽에 대한 지원만을 고려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은 보육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보육 현장에서 노력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노력으로 더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육교사 지원 시스템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러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또한 좋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교육 체제와 어린이집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필요하며, 좋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보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 참고문헌

- 강경희, 전홍주 (2013).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197-221. doi:10.14698/jkce.2013.9.6.197
- 국회도서관 (2023).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서울: 국회도서관.
- 김병만 (2012).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4), 5-31.
- 김병만 (2018a). 저출산 대책 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의 요구 및 전략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505-515. doi:10.35873/ajmahs.2018.8.6.047
- 김병만 (2018b). 학부모용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 개발. **교육혁신연구**, 28(4), doi:1-26.10.21024/pnuedi.28.4.201812.1
- 김병만 (2020a).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상향식 정책방안 수립연구. **교육과 문화**, 2(2), 59-72.
- 김병만 (2020b).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3), 92-103. doi: 10.22156/CS4SMB.2020.10.03.092
- 김병만, 김미진 (2018).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19대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 및 중요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75-95. doi:10.37918/kce.2018.01.108.75
- 김병만, 황해익 (2015). 델파이 조사에 기반한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113-142.
- 김정호, 홍석철 (2012).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박희준 (2024. 3. 7). [기고] 인구 감소...국가 존망 차원에서 다뤄야.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30413350888686>에서 2024년 3월 7일 인출
- 서문희, 이혜민 (2014). [연구보고 2014-12]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손서영 (2023. 12. 3).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2306>에서 2024년 3월 7일 인출
- 안다영 (2023. 10. 31). 아이 낳지 않는 사회...OECD가 본 한국 저출산 이유 **[특파원 리포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919>에서 2024년 3월 7일 인출
- 육아정책연구소 (2023). [연구자료 2023-01]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정현 (2018).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사회: 세상을 바꾼 댈서스의 고전 이론으로 바뀐 세상을 다시 바라본다**. 서울: 푸른길.
- 이강훈, 황해익 (2019). 텔파이와 베이비안 기법을 활용한 유아기 놀이성 평가의 방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891-923. doi:10.22251/jlcci.2019.19.15.891
- 이삼식 (2020). **한국 인구정책 변천과 시대적 함의**.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이소정 (2023).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옥 (2015).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장인수, 이소영, 정희선, 고제이, 김세진 (2022).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이지혜, 이선희, 이소영, 박종서(2023). **2023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 활용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수정, 이강훈 (2022). 창의 인성 증진을 위한 방과후 아동 돌봄교실 미디어 예술교육 콘텐츠 구성 평가척도 개발: 텔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4(1), 64-81. doi:10.23009/JEC.2022.4.1.64
- 정혜주 (2024. 2. 28). 저출산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정책수요자 중심 대책 발굴하겠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1209>에서 2024년 3월 7일 인출
- 정혜영, 강승지, 이연선 (2019).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저출산 정책시기별 연구동향 탐구: 영유아 보육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3(4), 821-844. doi:10.21459/kccr.2019.23.4.821
- 정혜영, 김병만 (2022). 빅데이터로 바라본 저출산의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32, 77-103. doi:10.37918/kce.2022.1.132.77
- 최병모, 김정호, 전영미 (2006).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대처하는 학교경제교육평가의 방향 탐색을 위한 전문가 텔파이 조사. **교육과정평가연구**, 9(2), 205-230.
- 최혜영, 박진재, 신나리 (2017).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정책: 정책 고찰과 새 정부의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한보육지원학회지**, 13(5), 21-41. doi:10.14698/JKCCE.2017.13.05.021
-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4). **국가통계포털**. 대전: 통계청.

- 홍석철, 정용관, 김상신 (2012). [2011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저출산 대응 사업군 심층 평가: 결혼·출산·육아 지원사업 중심으로.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Best, J. W., & Kahn, J. V. (2016). *Research in education*. Chennai, India: Pearson Education India.
- Duclos, E., Lefebvre, P., & Merrigan, P. (2001).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s: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Centre de recherche sur l'emploi et les fluctuations économiques,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CREFÉ)= Center for Research on Economic Fluctuations and Employment (CREFE), University of Quebec, Montrea.
- Kalwij, A. (2010). The impact of family policy expenditure on fertility in western Europe. *Demography*, 47(2), 503-519. doi:10.1353/dem.0.0104
- Okoli, C., & Pawlowski, S. D. (2004). The Delphi method as a research tool: an example, design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 Management*, 42(1), 15-29. doi:10.1016/j.im.2003.11.002

논문투고: 24.03.15.  
수정원고접수: 24.04.17.  
최종게재결정: 24.04.22.